



2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추진협의회 개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음 2월 29일) 제322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지난 1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도·전북지역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내 정치권과 새로운 전북 '맞손'

전북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주요 현안 논의
 지역 광역교통 마중물 '대광법' 개정에 속도 높이기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동성명서 통해 전북 입장 전제

김관영 도지사과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앞서 전북도는 민선 8기 들어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과 매월 조찬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 해결 등 새로운 전북 실현을 위한 대화 창구로 활용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2024년 국가예산 확보와 전북 주요 안건들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 공모선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대응', '새만금 농업융복합

총사업비 일괄 승인' 등에 대해 소관 실국장로부터 보고 받은 뒤 향후 추진 과제들을 놓고 토의했다.
 의원들은 국비 건의 필요성과 현안 사업 시급성에 공감하며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특히 내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하 대광법) 현안은 지난 2월 조찬간담회에 이어 주요 쟁점이 됐다. 전라북도과 전북여야 의원들은 대광법 관련 국회 현안을 공유하며 추진 속도와 완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

장은 "오는 21일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대광법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며 "소위 위원님들과 부처 설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에 전북 2개 국가산단 확정 성과가 있었다"며 "원팀 협치가 있어서 가능했기에 대광법 개정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자"고 했다.
 현재 대광법은 전북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며, 광역교통시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낙후된 교통인프라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는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주춧돌로 삼을 수 있어 전라북도과 전북 정치권이 주력하는 이유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상반기 목표는 대광법과 공공의대법 통과"며 "해당

소위 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또한 2024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부처별 예산 편성 중인 중요한 시기"라며 "전라북도과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에 의원실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 전북 추가 이전 공동성명서 결의 의견도 모아졌다.
 올해 상반기에 국토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각 시도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특성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중점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정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 여의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기관 전북이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라북도의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쌀 과잉생산 대응... 전북도, 벼 재배면적 5777ha 전환한다

전북도는 쌀 과잉생산에 대응하고자 벼 재배면적을 전환한다.
 지난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376만톤, 신곡수요량은 361만톤으로 15만톤이 과잉 생산됐다.
 시장에서 공급비축미를 포함한 90만톤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지난 2월 5일자 발표한 산지 쌀값은 17만3,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쌀 적정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논 타작물 전환 유도 위해 전라작물직불금 212억 지원
 전국 최대규모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17곳 844ha 조성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벼 재배면적인 11만3,775ha의 5.1%(인 5,777ha)을 논공, 가루쌀 조식료 등 타작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으로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해 추진되는 전라작물직불금으로 논공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에 21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규로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단지 17개소도 육성해 전국 최대 규모인 844ha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2018~2020년까지 추진하다 중단된 논타작물 생산지원 사업을 이어받아 올해 지원단가를 ha당 8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2,000ha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논, 콩 등 논타작물 생산 장려를 위해 논타작물단지 교육 컨설팅 및 시설·장비(67억원), 들녘경관체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48억원), 발식량작물 채종포 및 시설·장비(20억 원) 등을 지원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에 유리한 논공, 하계조사료, 가루쌀 등 대체작물을 육성해 농민의 소득을 늘리고 쌀 생산량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드론실증도시' 공모 선정

국토부, 전주·남원시 등 올해 15개 지자체
 사업규모·서비스 내용 따라 국비 차등 지원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전주시와 남원시 등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0일간 드론 실증도시 공모를 실시한 결과 40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강원 영월군, 충북 음성군, 충남 서산시, 태안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전남 고흥군, 여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등 1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규모와 서

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14억원 이하) 지원 받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드론 활용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확대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통해 사업화의 필요와 드론배송 사업과 50kg 이상 중(重)화물 운송 등의 우선과제를 사전 공지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향후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 및 택배·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 새로운 협치 농정 펼친다

기존 삼락농정위 '농어업·농어촌위원회'로 개편
 도의회 조례 공포...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키로

전북도가 새로운 협치 농정을 펼칠 체계 개편에 나선다.
 전북도는 민선 8기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비전 실현을 위한 농정 혁신 추진체계를 기존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전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로 전면 개편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존 삼락농정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농정 협치 기구로 자리매김했음에도 운영협의회 규모가 크고 분과가 일부 세부화되는 등 현안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이 노출됐다.
 이에 전북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위원회 명칭, 위원회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해 민선 8기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달리 위원회 위원 수를 172명에서 128명으로 조정하고, 15명 이내로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분과위원회를 10개에서 7개로 통

합운영해, 부서별 책임성 강화, 주요 현안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별 분과 운영 체계 마련 등 조직의 내실화·효율화를 꾀한다.
 도는 이러한 위원회 전면 개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예고(2~8일)를 거쳐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에 기존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도는 개정 조례를 공포한 후 3월말까지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제1기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보람있는 농민, 재능있는 농업, 사활하는 농촌 삼락농정 정책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비전 실현을 위해 전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